

Safety Main News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4.16 국민안전의 날' 지정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돼 재난 대응과 복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는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도 부여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돼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경찰·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

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정부가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반도체 사업장의 보건관리대책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강한 방안을 마련해 지도에 나갈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대책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사실 고용부는 지난 2007년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발병 사고를 계기로 집단역학조사(2008), 정밀작업환경평가 연구(2009~2011), 보건관리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모니터링(2009~2012) 등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왔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생산설비, 취급 화학물질 등의 변경주기가 짧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보건관리를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회사별로 '보건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노·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관리추진단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 활동의 계획(Plan)부터 이행(Do), 평가(Check), 보완(Act)하는 전 과정에 전문적인 지도·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장 보건관리 문제점을 폭넓게 도출하고 이를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를 통해 회사별 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개선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에서 사업장별 이행 실적을 평가토록 하면서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즉 지방관서에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위원회가 2차 평가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고용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협력업체 보건관리 등 최근 제기되는 보건관리 문제점에 대해 행정 역량을 집중, 반도체 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내년 1분기 중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

제품을 수거·분석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설비·보수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유해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관리추진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보건관리대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반도체 사업장에 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 내년 3월 12일까지 실시해야

위험성평가에 대한 최초평가 기한이 내년 3월 12일까지로 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현행 지침 상 매년 작성토록 되어있는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최

초 위험성평가 시에만 작성토록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최초 평가 기한을 2015년 3월 12일까지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명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의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로부터 1년 후이다. 다만, 2014년 3월 13일 이후에 설립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시평가 시기를 조정하고, 대상을 명확화 했다. 수시평가 실시 시기를 '정비·보수 등의 계획 실행 전'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다만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보수가 정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 규모를 기존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120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위험성평가 교육확인서를 발급하는 주체를 교육기관의 장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에는 공단지역본부장 및 지시장만 교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위험성평가의 최초 실시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성평가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지원자 제도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지원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여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비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재해의 약 80% 이상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전관리자 선임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크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달 17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지원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 전담인력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안전관리 체제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위협에 취약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재해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권 의원은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안전보건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 안행부, 안전대진단 시민참여 확산대회 개최

시민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안전대진단 시민참여 확산대회’가 열렸다.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안전대진단’ 캠페인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안전대진단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위험요소와 불합리한 제도들을 신고·개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안전사고 줄이기 다짐 결의대회, 차량용 안전스티커 부착, 안전대진단 카드섹션 퍼포먼스, 대학생 안전지킴이와 주요 내빈이 함께 참여하는 플래시몹 퍼포먼스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상



지난 11월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여형규 국토교통부 차관, 정우택 의원 (새누리당)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행정부의 안전대진단 캠페인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가 마련됐다.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지난 달 30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이후 7일에는 대전, 12일 울산, 18일 서울, 21일 광주, 25일 춘천, 12월 2일 대구 등에서 연이어 개최되며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 초·중·고 교원, 준안전전문가로 육성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교원을 준안전전문가로 육성하는 등 학교에서의 안전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활동 중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지난달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과 습관을 체득하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원을 준안전전문가로 육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과정 내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통합되는 문·이과 교육과정에 따라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이 설치된다.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토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

여 이를 토대로 안전교과 및 단원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소방대피 훈련 등이 체험 중심으로 전환되며, 현재 전국에 11곳에 불과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도 확대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유·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경우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토록 하고, 교원 임용 및 승진 시에는 신설 예정인 ‘(가칭)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기존 43만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는 3년 내 15시간의 안전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 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시키고, 법령에 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평가, 감사 시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 교육청,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